

건축공간연구원

연구과제
소개

구분	과제명	과제책임
기본 과제	지역맞춤형 건축정책을 위한 건축물 연령 지표 개발	송유미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모델 개선방안 연구	임보영
	노후계획도시의 탄소중립도시로 전환을 위한 건축물 생애주기별 탄소배출저감 방안 및 가이드라인 개발·활용 연구	김성준
	건축물 안전 및 사용성 향상을 위한 건축물 유지관리산업 진흥 방안	현태환
	이재민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회복력 제고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지원 방안 연구	박유나
	건축물 설계과정의 안전성 검토·평가제도 현황 진단 및 합리화 방안 연구	이화영
	인구감소도시의 컴팩트-네트워크 실현을 위한 생활권계획 활용방안	변은주
	임대형기숙사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기준 개선 연구	유제연
	공간특성을 고려한 지역상권의 공간관리 방안 연구	정인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의 운영실태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배선훈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모니터링을 통한 도시설계 제도 개선 연구	이혜원
	현대 정원도시의 다원적 기능 구현을 위한 계획방향 연구	김용국
	유산영향평가에 따른 세계유산지구의 공간관리 정책방안 연구	손은신
	탄소중립사회 달성을 위한 그린인프라 정보체계 개발방향 연구	허한결

기본과제

① 지역맞춤형 건축정책을 위한
건축물 연령 지표 개발

건축물의 분포 현황과 성능 등에 대한 정보는 지역의 정책과 사업 추진의 근거자료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건축물과 관련된 안전사고 발생 시 후속 조치로서 제도 개선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건축물의 안전기준이 강화되어 왔으며, 고성능 재료 사용, 신공법 개발 등으로 신축 건축물의 안전성은 점차 강화되었다. 반면에 연식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 건설 당시의 낮은 안전기준, 재료의 부식 등으로 인하여 신축 건축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할 수 있으며 재난·재해 발생 시 피해 범위가 클 가능성이 높다.

현재 건축물의 노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부처에서 발표하는 보도자료 및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데이터는 동수, 단위면적, 비율과 같이 단편적인 수치 또는 대용량의 원시데이터 형태로 제공하고 있어 즉각적인 파악과 해석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특정 시점의 단편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후 건축물 현황에 대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정책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에 직관적으로 중장기적인 대상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고 추이를 예측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맞춤형 건축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의 건축물 노후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하는 건축물 연령 피라미드 등을 작성하고 이를 유형화하는 등 지역맞춤형 정책 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개발된 지표는 정책사업 대상지 선정, 예산 배분 등에 있어 건축물의 노후화 현황과 함께 진행 추이 예측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지역 정책의 추진을 지원하고자 한다.

송유미

②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모델 개선방안 연구

최근 우리나라 전체 범죄 건수는 2021년 대비 2022년에 소폭 증가하였으며(1,531,705건→1,575,007건), 강력 범죄 발생 건수는 2022년에 대폭 증가(35,126건→43,927건)하였다. 2022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서도 사회불안 요인 중 '범죄로 인한 불안감'이 신중 질병, 국가 안보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는 범죄 발생과 범죄 두려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해왔다. 게다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이 선정되면서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예산과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은 사업 방식과 효과성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발달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이론을 국내에 소개하고, 이를 건축·도시 환경에 적용하는 사업 방식이 주를 이뤄왔고, CCTV 설치, 경관 개선 중심의 사업 양산, 사업 종료 이후 유지 관리 및 성과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인해 범죄 발생 양상이 변화하고 있고, 공·폐가와 노후 공공시설이 증가하는 등 지역의 물리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한 범죄예방 사업 방안들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이 본격화된 지 약 20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관련 법, 제도, 사업들의 현황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이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지 그 흐름 변화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1·2인 가구 증가, 외국인 노동자 증가 등의 사회환경 변화는 지역의 범죄 발생 건수와 범죄 두려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에 대한 수요를 발생시키고 있기에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사업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범죄예방 효과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임보영

③ 노후계획도시의 탄소중립도시로 전환을 위한 건축물 생애주기별 탄소배출저감 방안 및 가이드라인 개발·활용 연구

정부는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 등을 통한 노후계획도시 등의 대대적인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1기 신도시의 경우 10만 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에 수반되는 철거와 재건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할 뿐 아니라 개발 이후 운영 단계에서 에너지사용량 또한 기존 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지속가능성', '탄소중립'을 고려하여 노후된 주택들을 재건축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와 탄소배출저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기술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실현 수단으로써 국가 정책 측면의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노후 계획도시들과 같이 특별법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대규모 재정비, 재건축을 진행하는 경우, 건축물 또는 단지별로 생애주기인 해체·건설·운영 단계별로 인간의 탄소배출저감, 제로에너지 달성을 유도하기 위한 핀셋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 이는 강제적인 사항과 인센티브를 통한 유도 사항 모두를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면, 특별법 내 관련 법령 조항 신설 및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 그리고 기본계획 추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가 그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노후계획도시들의 재건축을 가정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별 탄소배출량 및 에너지수요량을 정량적으로 산정·검증한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재건축 단계별로 탄소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절감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선 방안 및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한다. 향후 이 연구가 민간 주도의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과정에서 '탄소중립도시'라는 공공의 목표 달성을 위한 건축·도시 분야의 정책적·제도적 수단 중 하나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성준

④ 건축물 안전 및 사용성 향상을 위한 건축물 유지관리산업 진흥 방안

건축물의 안전 및 사용성 향상을 위해 국가정책은 건축물의 유지 및 관리점검 제도의 확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법」을 통해 안전점검 및 관리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인구감소에 따른 신축건축물 물량의 감소 및 기술발전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건축물 시장의 패러다임이 기존 신축 시장에서 유지관리 시장으로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축물의 유지·보수 시장 전망을 2030년에는 14조 7,23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향후 노후 건축물의 지속적 확대, 인구 감소로 인한 신축 건축물 시장의 축소, 기존 건축물의 사용성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유지관리 산업의 확산,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국가 제도 및 정책의 추진 등 건축물 유지관리 산업의 성장이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관련된 산업을 규정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련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체계적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건축물 유지관리업 신설 및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는 건축물 유지관리 산업의 정의 및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건축물 유지관리 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 및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건축물 유지관리 산업 발전 전략에 따른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이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건축물 유지 및 관리업무가 전문가에 의해 체계적으로 수행되어 국민의 일상안전이 확보되고, 건축물의 사용성 증진을 통해 건축물 거주자 및 사용자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⑤ 이재민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회복력 제고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지원 방안 연구

포항지진, 강원도 동해안 산불, 역대급 폭우 등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유형은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 주택 및 이재민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이전과는 다른 형태나 규모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 복구기간이 길어지고 이에 따라 이재민들의 임시주거시설 거주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 재난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단숨에 앗아가기 때문에 재난 피해자들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임시주거시설은 이재민의 일상 활동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재민들의 거주성이 고려되지 않은 임시주거시설에서의 장기거주는 재난 PTSD 회복 저하, 질병 유발 등 부정적인 영향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국내의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기존 지침은 신속한 공급, 응급구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재민들의 임시주거시설 장기거주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임시주거시설은 제공되는 시설의 목적에 따라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재난 발생 이후 피해규모, 이재민 특성 등을 반영한 적합한 주거공간 제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 임시주거시설 지원은 단기구호 및 대응에 적합하므로 이재민들의 기존 생활, 해당 지역의 특성 등에 따른 이재민의 거주성을 고려한 중장기 임시주거시설의 요건과 주거 측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이재민 생활안정 제고를 위해 필요한 거주요건 및 가치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중장기 임시주거시설 지원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임시주거시설 계획 및 지원 패러다임이 수용중심에서 거주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 및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박유나

현태환

6 건축물 설계과정의 안전성 검토·평가제도 현황 진단 및 합리화 방안 연구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은 일반적으로 건축물 구조안전사고의 발생과 궤를 같이한다. 특히 2014년 전후로 발생한 건축물 붕괴 및 지반침하 사고를 기점으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와 구조안전 심의 제도화, 지하안전평가 제도 신설 등 건축 설계과정의 구조안전성 검증 체계가 고도화되어 왔다.

그러나 국내 건축물 안전정책이 사건사고 수습과 그 원인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급속히 추진되면서 관련 법령 간 관계 설정, 제도 간 역할 및 절차에 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 그 결과로서 일부 평가제도의 경우 건축물 안전 관련 검토·평가제도 및 대상의 확대 과정에서 일부 유사·중복적 규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의 경우 지반안전 측면에서 검토항목의 내용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령에 따라 운영되면서 양 제도를 모두 이행해야 하며, 선행 평가·검토 내용이 후행 심의단계에서 변경되거나 주관적인 심의의견으로 인한 예측 가능성 저하, 업무 적체로 인한 설계기간 장기화를 초래하고 있다.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보는 국민의 안전에 있어 필수적이지만, 복잡다단한 절차로 인한 규제자와 피규제자 양측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 적용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차상의 합리화도 필요하다.

이 연구는 건축물 설계과정에서 구조안전과 관련한 검토·평가제도의 운영 실태와 실제 참여주체 의견 수렴을 토대로 운영 및 절차상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평가·심의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중복·불합리한 절차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 규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화영

7 인구감소도시의 콤팩트-네트워크 실현을 위한 생활권계획 활용방안

도시를 둘러싼 사회적·경제적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기존 도시계획 패러다임에도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성장과 개발 중심의 기존 접근법에서 벗어나 축소와 쇠퇴, 인구 감소와 저성장, 기술 진보 등 다양한 현대 도시의 문제에 대응하는 도시계획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공간 수요에 부합하는 도시계획 체계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생활권계획을 도시계획체계에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다.

그간 생활권계획은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 비법정 방식으로 도입·운영된 바 있으나, 인구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중소도시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구감소도시들은 빈집 증가, 도심 밀도 저하, 기반시설 유지·관리의 비효율성과 같은 문제를 공통적으로 겪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공간의 효율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인구감소에 직면한 도시의 공간적 대응 전략으로 '컴팩트-네트워크' 개념을 구체화하고, 이를 적용·실현하기 위한 생활권계획의 활용 방안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2022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 곳을 대상으로 공간구조적 차원에서 콤팩트-네트워크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 개념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요소와 방법론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신규 도시계획체계의 본격적 운영에 앞서 새로운 제도가 마주칠 수 있는 잠재적 문제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 과제를 모색함으로써 신규 도시계획체계의 안정적 정착과 생활권계획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은주

8 임대형기숙사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기준 개선 연구

1인가구 증가, 공유경제 확산 등 경제·사회적 변화의 영향으로 2010년대 이후 부엌, 거실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유주거'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및 대도시 등 주거비용이 높은 지역에서 1인가구를 중심으로 공유주거가 확산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가진 접근성, 공간의 개성, 편리성, 임대가격 등의 단점을 종합적으로 보완하는 대안으로 여겨졌다.

2023년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공유주거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임대형기숙사'라는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고, 임대형기숙사의 개인공간 및 공유공간 면적 등을 규정하는 '기숙사 건축기준'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현재 임대형기숙사의 면적기준은 기존 다중생활시설과 유사한 수준이다. 동시에 건축물 용도분류체계상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하위용도로 분류되어 용도지역, 부설주차장 설치 등의 규제가 다른 유사 건축물 용도에 비해 매우 완화되어 있으며, 더불어 규모 상한과 운영·관리에 대한 기준 또한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제도의 미흡함으로 인해 관련 전문가들은 도입 취지에 반하는 저품질의 편법적 임대형기숙사가 난립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지자체 또한 같은 이유로 임대형기숙사를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임대형기숙사의 건축물 용도 신설에 따른 건축 및 운영상의 문제를 진단하고, 관련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임대형기숙사의 건축물 용도 도입 취지를 달성하고, 새로운 유형의 건축물이 우리의 일상에 들어오므로써 발생할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유제연

9 공간특성을 고려한 지역상권의 공간관리 방안 연구

상권은 민간의 경제활동이 집적된 공간으로 지역경제의 중추역할을 하며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공익적 효과가 있으며 공공재 성격을 가진다. 지역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도모하는 경제적 장소이자 일상의 대면활동과 문화향유 경험을 제공하는 사회적 장소로서, 상권의 쇠락은 지역 전체의 활력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한 현안이다. 한편, 최근의 상권 이용은 단순 구매 행위뿐만 아니라 '리디단길' 등 독특한 공간특성을 가진 상권에 '로코노미(Loconomy, Local+Economy)' 공간소비문화 양상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12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2025)'을 발표하며 지역가치를 연계한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특화재생), 문화체육관광부(문화도시사업)등 다양한 부처에서도 상권을 포함한 지역활성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의 상권정책은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공간적 지원사항으로는 아케이드 설치, 주차장 조성, 간판 정비 및 상징조형물 중심의 기본적인 인프라시설 및 공간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사업구역 단위로 지원하여 주변지역과 연계된 지역활성화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법정 구역의 지정요건은 지역의 공간적 특성에 상관없이 상인 등의 조직구성 조건을 바탕으로 상업지역, 면적, 점포수를 임의로 설정하여 상권의 실제 공간 범위와는 차이가 있다.

이 연구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 활동에 미치는 공간특성을 고려하여 주변지역과 연계한 지역상권 공간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상권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간관리를 도모하고 지역상권 기반의 지역활성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정인아

10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의 운영실태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우리나라는 2018년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65세 이상 장애인구도 점차 증가하여 2020년도에는 49.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을 통하여 시설에 대한 이용과 접근을 높이기 위하여 2008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BF)인증 제도를 시행하였다. 인증 제도 도입 이후 2015년 국가 및 지자체 발주 공공건축물 인증 의무화가 이루어졌으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은 건축물뿐만 아니라 도로, 공원 등으로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2016년 이후 건축물의 인증 교부건수는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8년에 고안되어 유지되고 있는 인증 체계와 절차가 현재 사회가 요구하는 내용에 적합한 방식인지, 6개 분야 94개 지표를 인증기관의 담당자와 심사위원이 검토하는 방식이 효율적인 평가 방식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인증 관련 제도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인증 취득에 과도한 기간이 소요되어 초기 설정된 설계용역기간 내에 인증을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거나 인증 운영기관 간에 공통된 운영 기준의 부재, 인증 범위를 벗어난 심의의견 제시 등 운영 방식과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용자 행태, 대상지 특성, 건축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 유관 법령별로 동일한 시설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 또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의 초기 도입 취지를 검토하고,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인증의 예측가능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건축 생산과정에서 규제처럼 작동하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절차 개선을 통하여 건축 산업 활성화는 물론이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

배설희

* 보건복지부. (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4월 20일 보도자료.

11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모니터링을 통한 도시설계 제도 개선 연구

2019년 7월 국토교통부의 신규 공공택지 입체적 마스터플랜 적용 정책 도입 후, 같은 해 3개 지구(과천과천, 수원당수2, 안산신길2)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주요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도시건축통합계획 마스터플랜, 입체적 마스터플랜, 도시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등의 이름으로 공모를 시행하고 있다.

도시건축통합계획이란 법정계획인 지구계획 수립에 앞서 지구지정 후 입체적 마스터플랜 공모를 시행하고 당선된 팀이 지구계획 수립팀과 협업하여 당선안의 계획 개념을 기반으로 법정계획인 지구계획을 수립하는 도시설계기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건축통합계획의 도입으로 일부에서는 마스터플랜 당선자가 총괄건축가의 역할을 하는 등 토지이용계획과 지구단위계획에 이르는 과정이 엔지니어링 기반의 계획으로 진행되는 기존의 방식과 상당한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였다.

하지만 선행연구 등에 따르면 마스터플랜 당선팀과 지구계획 수립팀 간의 협업체계 구축의 어려움, 사업성 확보의 어려움, 지구단위계획의 평면적 작성지침의 한계 등으로 입체적 마스터플랜이 지구계획 승인 과정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3기 신도시 및 시범지구에서 추진된 도시건축통합계획의 실현 과정을 추적하여 절차, 주체, 내용 측면에서 성과와 한계를 밝히고 도시건축통합계획의 정착을 위한 도시설계 제도 및 운영 과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기 신도시 이후 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 시 계속해서 도시건축통합계획이란 이름으로 과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현시점에서의 모니터링을 진행함으로써 향후 적용 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혜원

12 현대 정원도시의 다원적 기능 구현을 위한 계획방향 연구

20세기 초 영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했던 정원도시 개념이 최근 우리나라에서 부상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정원도시를 도시 발전 전략으로 선언하였고, 중앙행정기관 역시 정원도시의 지정과 확산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정원도시는 정원에 내재된 가치를 도시 차원에서 구현함으로써 도시가 직면한 문제와 도전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정원도시는 단순히 정원 면적을 늘리고, 정원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이라는 자연·문화적 자원을 기반으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세계적 차원), 인구감소와 지방소멸(도시적 차원), 바이오필릭과 불안사회(개인적 차원)와 같은 사회·경제·환경 문제에 대한 도시의 대응 전략인 것이다. 정원도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원도시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목표(KPI)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공간(spatial)·활동(behavioral)·제도(institutional) 차원의 계획을 정교하게 수립해야 한다.

이 연구는 현대 정원도시의 다원적 가치 구현하기 위한 정원도시 계획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정원도시의 개념과 다원적 가치를 설정한다. 문헌연구를 통해 오늘날 정원도시가 제공할 수 있는 가치를 종합하고, 전문가 설문 조사·분석을 통해 기본적 가치와 선택적 가치를 구분한다. 둘째, 현대 정원도시의 다원적 가치를 기준으로 국내 정원도시 계획과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한다. 셋째, 일반시민들이 정원도시에 기대하는 가치와 계획 방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다. 넷째, 정원도시 브랜드 구축에 성공한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정원도시 계획 방향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다섯째, 정원도시 구현을 위한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작성한다. 여섯째, 지속가능한 정원도시를 위한 관련 제도와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이 연구를 통해 정원도시가 국민 삶의 질 향상, 도시 경쟁력 강화, 탄소중립사회 실현 등에 기여하는 도시 정책이 되길 기대한다.

김용국

13 유산영향평가에 따른 세계유산지구의 공간관리 정책방안 연구

197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채택 이후 현재까지 등재된 세계유산은 약 1,200개에 이른다. 이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정책 또한 등재 중심에서 점차 소재국의 관리체계를 통한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2018년 이후 의무화 도입이 시작된 유산영향평가(Heritage Impact Assessment, HIA)의 실시이다.

국내에서는 2021년 2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세계유산구역 및 완충구역을 포함한 '세계유산지구'를 유산영향평가의 시행범위로 규정하였다. 또한 2023년 10월에는 법령 개정을 통해 유산영향평가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세계유산지구 내 개발사업 시 유산영향평가 실시 의무 및 관리·감독 미이행 시 벌칙 규정 등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등재된 국내 세계문화유산 14개소의 경우 유네스코 등재 시 제출된 세계유산지구와 국내 문화재 관리구역이 일치하지 않고, 유산영향평가가 일종의 규제로 인식되는 어려움으로 2021년 법령 제정 이후 세계유산지구를 고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국제적 기준에 따른 유산영향평가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어 완충구역 바깥이라 하더라도 특정 개발행위가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이 연구는 국내 유산영향평가 제도 도입에 따라 세계유산지구의 효율적 공간관리체계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내 문화재구역을 비롯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경관법」 등 타법과의 연계를 통한 포괄적 공간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유산영향평가 수행 방안으로서 다양한 경관관리 방법론 적용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국내 세계유산지구의 효율적 공간관리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손은신

14 탄소중립사회 달성을 위한 그린인프라 정보체계 개발방향 연구

탄소배출로 인한 기후변화는 이미 다가온 위기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23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되었으며,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을 통해 현실적 탄소배출량 감축수단을 법정 국가계획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탄소중립사회 달성을 위한 도시 및 인프라 차원의 옵션 중 그린인프라를 가장 실현가능성 높고, 신뢰도가 높으며, 효율적인 옵션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그린인프라가 도시 및 인프라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중요도가 높음에도 탄소중립 계획에 그린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한 관련 데이터 구축은 미비한 실정이다. 국내·외 연구들은 개체목 단위의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효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데이터 구축은 공원 및 녹지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체목 단위 데이터는 전국 단위 데이터가 부재하거나 지속적인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경기도의 'RE100 플랫폼'과 같이 지자체별 예산을 소비하여 데이터를 구축하거나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는 데이터가 미비한 상태로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하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체계적 그린인프라 데이터를 구축을 위해 탄소중립 정책 활용 및 현황평가를 위한 그린인프라 정보체계 구축 방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현재 구축되고 있는 그린인프라 정보 목록과 속성정보를 조사함으로써 향후 구축되어야 하는 그린인프라 정보 목록을 도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그린인프라 정보체계 추진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체계적 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기초데이터 수집 현황, 관련 기술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단기, 중기, 장기적 데이터 구축 로드맵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지자체 단위 탄소중립 계획 수립을 위한 그린인프라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그린인프라를 활용한 탄소중립 달성 효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허한결

상징공간에 대한 인문학적 시선 국제세미나 개최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건축공간연구원은 2월 1일(목) 서울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상징공간에 대한 인문학적 시선'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국가 정체성과 상징성을 담은 장소이자 역사·문화·시민 소통공간을 의미하는 '상징공간'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각 나라의 상징공간에 대한 중요성과 의미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국가상징공간의 핵심가치 발굴과 조성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김성도 고려대학교 교수가 '상징공간의 인간학 서설'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Massimo Leone(마시모 레오네) 이탈리아 토리노대학교 교수가 '아고라에서 포럼을 거쳐 피아자 piazza까지 : 상징적 장소로서의 로마의 광장들'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Pascal Lardellier(파스칼 라르들리에) 프랑스 부르그뉴대학교 교수가 '기호적 도시로부터 의례적 도시로 : 세레모니적 도시성을 위한 이론적 이정표'를 발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종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배제대학교 교수)이 좌장을 맡아 김성도 교수, Massimo Leone 교수, Pascal Lardellier 교수, 오성훈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하여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국가상징공간 조성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2024 제2차 AURI 건축도시포럼 '대한민국 메가시티의 미래'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한국건축가협회는 2월 5일(월)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24 제1차 AURI 건축도시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 메가시티의 미래'라는 주제로, 건축·도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인구감소 시대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메가시티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먼저, 천의영 한국건축가협회 회장이 '메가시티 한국'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최봉문 목원대학교 교수가 '메가시티 이해와 제언-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윤성훈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위원장, 임진우 한국건축가협회 부회장, 이경석 국토교통부 광역급행철도신속개통기획단장, 전영훈 대전광역시 총괄건축가, 김재혁 한마음재단 전문위원, 성은영 건축공간연구원 공간문화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건축·도시 분야의 정책적 대응 방향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2024 제3차 AURI 아카데미 '한일국제세미나'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3월 15일(금)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24 제3차 AURI 아카데미 한일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동세미나는 '도시의 형성 과정과 도시경관 관리체계'를 주제로, 아시아경관디자인학회 및 일본 규슈대학과의 연구 교류 및 전문가 네트워크 협력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첫 번째 발제는 사카이 다케루 아시아경관디자인학회 회장(규슈대학 교수)이 '일본의 도시경관 관리체계'를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두 번째 발제는 윤두원 KPA 행정중심복합도시 기획조정단 실장이 '행복도시 형성과정과 세종 도시경관'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엄철호 건축공간연구원 부원장을 비롯하여 이상민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심경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백기영 KPA 행정중심복합도시 기획조정단 단장(유원대 교수), 한승욱 박사(前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연구위원), 홍동기 규슈대학 조교가 참여하였으며, 도시경관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다. 건축공간연구원은 이러한 국제교류를 통해 연구품질 제고 및 연구분야 발굴 등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고자 한다.

2023 AURI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3월 21일(목)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23 AURI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연구원의 2023년도 주요 연구 성과를 더욱 많은 국민들과 공유하고자 마련되었다.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연구원은 국민 삶의 질, 공간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에 힘써왔으며, 보고회를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국민들과 나누고자 한다"라며 행사의 목적을 강조하였다.

보고회 1부에서는 국민들이 직접 뽑은 우수 연구과제 4건에 대한 발제가 진행되었다. 먼저 '건축규제 혁신 지원사업'의 정책기여실적과 향후 계획을 배설했던 부연구위원이,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김민지 연구원이 발표하였다. 이어 조상규 선임연구위원은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활용한 건축민원 대응 효율화 방안 연구'를 통해 건축법령 해석지원 시스템을 개발한 과정을 소개하였으며, 박성남 연구위원의 '맞춤형 공간전략 도출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진단 체계 연구'의 성과 발표가 진행되었다. 2부에는 김영현 건축정책본부장의 '변화하는 사회, 변화하는 건축: 메가트렌드 시대 건축정책의 성과와 과제', 성은영 공간문화본부장의 '사람과 삶의 이야기가 있는 장소와 공간문화 연구', 조영진 지속가능공간본부장의 '공간환경의 안전을 넘어, 빅데이터 활용 Active Living을 향해'까지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수행한 연구와 그 성과를 소개하였다.

이후에는 이영범 원장(좌장), 김소라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 전영훈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이재현 대한경제 기자가 참여하는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건축공간연구원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MOU 체결

건축공간연구원과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2월 28일(수) 세종 박연문화관에서 '2024 청년 꿈 키움 사관학교'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세종시 구직 청년의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원의 전문가(현직자)를 멘토로 연계 지원하는 것으로, 양 기관은 개인 맞춤형 멘토링 진행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건축공간연구원 이영범 원장은 “건축·도시분야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건축공간연구원이 지역사회와 함께 미래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더 많은 청년이 새로운 기회를 얻어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